

日 이시바 정권 ‘흔들’... 역사문제 담보 등 한일관계 ‘찬물’

日 중의원선거 여당 참패 영향

자민당, 당분간 연립정권 집중할 듯
韓 정부, 한일관계 60주년 고심 커
“일본의 대담한 결단은 어려울 것”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는 모처럼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은 한일관계에 찬물을 부은 격이란 분석이다. 집권당의 정국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당분간 연립 정권 확대나 정당 간 합종연횡 등 국내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등 외교 쪽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내년 한일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이 커졌다.

28일 일본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중의원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AP 뉴시스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로 이시바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권력 다툼이 시

작되면 책임론이 불거진 이시바 총리가 사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시바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결단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한다면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인 자민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지금의 한일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한일 역사 문제가 담보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강경 보

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안팎으로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도 최근 한일 관계개선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보상 등 변화된 행동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발전과 안정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본 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현 단계보다 한층 더 진전된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19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금 스캔들’ 파문 속에 집권당의 정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에 혼란이 예상된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2024美 대선...’서 계속

“기업 경영활동 위축... 산업·수출 경쟁력 떨어져”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업계반응

철강·정유·석화 업계 등에 치명타
삼성전자, 연간 3500억 추가 비용
SK하이닉스, 최소 연간 1700억 예상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단행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공사는 지난 23일 산전용 전력 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1원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1kWh당 8.5원을 인상하고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을)은 1kWh당 16.9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전력 요금 인상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안겨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한전의 적자 부담을 기업에만 전가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기업들의 불만에 대해 “2021년부터 누적된 41조원의 적자(연결 기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



ChatGPT가 생성한 산업용 전기료 상승 이미지.

며 “부담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10월 16.6원 오른 데 이어 지난 2023년 11월에도 10.6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용 전력 요금 인상이 발표된 지난 23일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전력 수요가 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기업 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는 건설업계 침체의 영향을 받아 올 3분기 실적 부진을 겪었다. 지난 25일 3분기 실적을 공시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모두 지난 분기 대비 적자 전환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는 연 11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1538억원)의 7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반도체 제조기업도 타

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에서 전기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삼성전자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은 2만 2409GWh(기가와트시)이며 이 중 90% 가량이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35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연간 최소 1700억원 이상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과 동시에 저전력에 힘쓰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제조분야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경기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기업들이 고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떠안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략 전체 요금을 5% 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트럼프, 제조업성장 촉진 법인세 15%로 인하 공약

이럴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IRA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그대로 지속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은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 현지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 투자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세를 15%(현행의 6%포인트 인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즉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다. 한미는 이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다. 한마디로 올해 타결된 SMA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불발된다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돼 안보 환경의 불안도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

기재부, 올해 세수부족 29.6조 예상... 기금 16조 투입

>> 1면 ‘기재위 국감’서 계속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월 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평기금 유동자산 규모가 수직됐고, 이는

실질상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9조 6000억 원이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조~16조 원 규모다.

이 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비

중이 가장 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유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한다. 외평기금이 2년째 세수 부족분 대응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날 동시에 열린 기재위의 국제청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의혹을 문제삼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1억 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구 의원은 “양평동 매입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제청장은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